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중심으로 *

권수현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이성우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지표는 소득격차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과 9개의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감 여부로 설정했다. 독립변수들은 객관적 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경제인식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전자의 변수로 소득, 고용 지위, 복지서비스 경험을, 후자의 변수로 소득격차 인식, 시장에 대한 태도, 국가와 가정 경제에 대한 전망, 북한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선택했다. 분석결과, 객관적 지위 변수 중에서는 고용지위와 복지서비스 경험이, 주관적 인식 변수 중에서는 소득격차 인식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복지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복지태도는 경제적 안정성, 복지경험,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복지태도, 객관적 경제지위, 주관적 경제인식.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5361).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임연구원, 제1저자.

*** 연구교수, 교신저자.

I. 문제제기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welfare attitude)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한국사회 북한이탈주민¹⁾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가에서 입국한 이민자들과 달리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으며, 정착금, 주택 알선과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담당관,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특례, 특례편입학, 학비지원,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등의 정착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제도’는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급 기준이나 액수 등에 있어 세부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²⁾

1)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한편,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월남귀순자’로 호명되었다(최대석·박영자,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51권 제1호 (2011), p. 188).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칭과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쳤다. 초기인 1950년대에는 특별한 법적 조건 없이 군 안보기관에서 월남귀순자를 관리·지원하다 1962년에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1975년에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으로 개정)을 제정하면서 원호처(현 국가보훈처)에서 월남귀순자를 관리·지원했다. 1978년 12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하면서 이전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국가보훈처가 1984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자 1993년 6월 ‘귀순북한 동포 시행령’을 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994년 러시아 별목공이 대거 귀순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규모를 대폭 삭감했고, 물질적 지원 위주에서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1997년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복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출신 국민과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남한입국은 자유체제를 선택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어 북한체제를 버리고 남한체제를 선택한 행동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긍정적 대우와 인식을 요구한다”³⁾고 밝혔다. 즉, 남한주민과의 동등한 대우를 원하는 동시에 남한주민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동등한 대우와 특별한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등한 대우는 인격적 차원에, 특별한 대우는 물질적·정신적 차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착지원제도는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한국사회 적응과 복지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단일한 특성을 지닌 특별한 집단으로 접근하고 집단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집단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여러 가지 혜택이 차별적으로 주어질 경우 왜곡된 사회인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회집단 구성원들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북한에서의 경험과 한국에 들어온 이후 복지경험이 실제 어떤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과 혜택이 그들에게 어떤 복지태도를 갖게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울시의 청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01), pp. 199~202).

3) 박영자,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 『미드리』, 제5권 (2011), p. 9.

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 원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잔여적 또는 자유주의 복지국가(residual or liberal welfare state)로 규정된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남한사회가 복지체제의 전환을 시도한다고 할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복지 제도와 정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남한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나 의식,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연구는 더욱 더 필요하다. 통일과정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장밋빛일 수 없으며, 통일과정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간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된 한반도의 새로운 복지체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연구는 중요한 경험적·실증적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첫 탐색적·경험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연구는 복지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내 다양한 정체성과 위치성을 가진 집단들이나 소외된 집단들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태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연구에서도 연구주제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2장에서는 복지태도와 관련한 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경험이나 인식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방법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경험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함의와 한계를 논한다.

II. 이론적 검토

1. 복지태도

복지태도는 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제도, 정책, 사회현상 등)에 대한 인식, 신념, 선호 등을 의미한다.⁴⁾ 복지태도는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이라는 단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복지태도라는 영어단어를 복지의식으로 번역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⁵⁾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복지의식은 복지에 대한 감정과 인상, 가치와 신념 자체로 마음의 내용을 의미하며, 복지태도는 그에 기반을 둔 행위 지향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갖는다며,⁶⁾ 두 단어의 구분하고 복지의식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⁷⁾ 다른 학자들은 복지의식보다는 복지태도가 덜 모호한 개념이며, 실증적 분석과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⁸⁾ 복지태도라는 단어를 선호하기도 한다.⁹⁾ 그런데 복지태도와 복지의식을 개

-
- 4)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9권 (2011), pp. 213; 최균·류진석,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섭,” 『사회복지연구』, 제16권 (2000), pp. 223~254.
- 5) 김영순·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p. 214; 이성균,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2002), pp. 205~229.
- 6) 김영순·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p. 213.
- 7) 이중섭,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2009), pp. 73-99; 주은선·백정미,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제3호 (2007), pp. 203~225.
- 8) 노대명·전지현,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 35.

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두 개념을 구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들 경험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들은 일정 부분 상당히 중복된다. 현재의 연구 흐름과 경향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복지태도에 대한 범주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태도의 배경이 되는 복지국가나 복지에 대한 사회정치적 가치관과 관련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¹⁰⁾ 전자는 연금, 의료,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의 지지 여부 등이 해당되며, 후자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가의 역할, 세금에 대한 인식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복지태도를 모두 측정해 각각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2. 복지태도 결정요인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은 크게 경제적 설명과 비경제적 설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9)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1권 제1호 (2015), pp. 27~57; 이한나·이미라,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2010), pp. 254-286; 허수연·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호 (2016), pp. 203~235.
- 10) 김희자,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제16집 (2013), p. 63.

경제적 설명 중 객관적 지위와 관련한 설명은 계급 또는 계층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기술적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시장분배의 재조정을 통해 이뤄지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소득이 높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보다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복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¹¹⁾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도 복지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가져온다. 실업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실업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¹²⁾ 또한 노동자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특징도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반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보다 재분배 정책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¹³⁾

이상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합리성, 즉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 내에

11) Alan Meltzer and Scott Richard,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No. 5 (October 1981), pp. 914-927; Elim Papadakis, "Class Interests, Class Politics and Welfare State Regim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4, No. 2 (1993), pp. 249-270; Stefan Svallfors,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Vol. 38, No. 1 (1995), pp. 53-74; Peter Taylor-Gooby, "Two Cheers for the Welfare State: Public Opinion and Private Welfar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2, No. 4 (1982), pp. 319-346.

12) 권혁용,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선호,"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3), p. 305; 서재욱·김윤태,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1호 (2014), pp. 95-121.

13)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4 (2001), pp. 875-893.

서 개인이 갖고 있는 소득과 지위, 기술 등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결정하고, 각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경제적으로 하층계급 또는 저소득 계층이지만 상층계급이나 고소득 계층보다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¹⁴⁾

비경제적 또는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설명은 개인의 신념(belief)이나 정치적 성향(political ideology) 또는 사회적 가치(values)에 따라서도 복지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복지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윤리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¹⁵⁾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집단이 복지국가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민주적 가치들을 더 지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도 하다.¹⁶⁾ 사회적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신념의 차이도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재분배나 세금에 대한 선호가 낮은 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14) Roland Benabou and Efe Ok,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No. 2 (2001), pp. 447-487; Anton Derks, "Are the underprivileged really that economically 'leftist'? Attitudes towards economic redistribution and the welfare stat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3, No. 4 (2004), pp. 509-521.

15) Mads Meier Jaeger, "What Makes People Support Public Responsibility for Welfare Provision: Self-Interest or Political Ideology? A Longitudinal Approach," *Acta Sociologica*, Vol. 49, No. 3 (2006), pp. 321-338.

16) Yeheskel Hasenfeld, and Jane A. Rafferty,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Vol. 67, No. 4 (1989), pp. 1027-1048.

수록 증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¹⁷⁾ 또한 정치문화와 관련된 가치들(개인주의, 인도주의, 작은 정부 등)도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기보다는 양가적인(ambivalent)¹⁸⁾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⁹⁾

비경제적인 객관적 지위에 주목한 연구들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과 같은 요인들도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제공에 우호적이며, 양육해야 할 아동이 있는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⁰⁾

이러한 요인들이 남한주민의 복지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경험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계급이나 계층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핵심적으로 진행됐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남한주민들의 복지태도에 있어 계급이나 계층의 영향력이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나 지출 확대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이중성(duality)을 보인다.²¹⁾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소득계층이나 경제활동지위에 따라 복지

17) Alberto Alesina and George-Marios Angeletos, "Fairness and Redistribu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5, No. 4 (2005), pp. 960-980.

18) 양가성은 같은 대상에 대한 평가적 반응이 좋다와 나쁘다와 같이 서로 상반되지만 그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p. 30).

19) Stanley Feldman and John Zaller, "The Political Culture of Ambivalence: Ideological Responses to the Welfare St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1 (1992), pp. 268-307.

20) Svallfors,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pp. 53-74.

21)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

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²²⁾

한편, ‘어떤’ 복지에 대한 태도를 묻느냐에 따라 복지태도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성장과 분배 또는 선별과 보편 중 어느 것을 더 지향하느냐와 관련해 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과 소득 수준이, 후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개별 복지정책(국민연금, 실업대책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빈곤층 생활지원, 교육, 아동가족지원)에 대해서는 소득, 경제활동상태, 직종,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한 선호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⁴⁾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태도에 있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²⁵⁾ 특히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 그것을 부담하려는 의

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pp. 47~49; 양재진·민효상,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제88권 (2013), pp. 48~96.

22) 김수완 외,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2호 (2014), pp. 67~90; 김윤태·서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동향과 전망』, 통권 90호 (2014 봄호), pp. 331~378; 서재욱·김윤태,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1호 (2014), pp. 95~121; 허수연·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pp. 223~226.

23) 김수완 외,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pp. 79~81.

24) 김윤태·서재욱,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pp. 362~368.

25)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p. 38; 김수완 외,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pp. 84~85; 서재욱·김윤태,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p. 11; 하솔잎·이우진,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2016), pp.

지가 약한, 비용 회피적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성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연령이나 세대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장 지향적이고 선별 지향적인 복지태도를 보여 세대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한편,²⁶⁾ 복지정책을 세분화할 경우에 연령이나 세대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²⁷⁾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아동가족지원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특히 30대의 경우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성향은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보편주의나 분배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별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⁸⁾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남한주민의 복지태도 또한 아직까지 일정한 방향성이나 일반화의 가능성을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계급이나 계층, 정치적 성향,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복지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해본다.

135~136; 허수연·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pp. 219~226.

26) 김수완 외,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pp. 84~85; 허수연·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pp. 219~226.

27) 김윤태·서재욱,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pp. 355~362; 허수연·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pp. 219~226.

28) 김수완 외,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pp. 355~362; 허수연·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pp. 219~226.

3.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와 연구가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적응과 관련된 현황과 경향,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이며,²⁹⁾ 다른 하나는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와 해결책을 다루는 연구이다.³⁰⁾

복지태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으며, 일부 연구들이 복지 서비스나 사회보장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요구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³¹⁾ 그런데 이 연구들은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
- 29) 김영일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제4호 (2014), pp. 127~161;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7a);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7b);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에 관한 연구,” pp. 179~239; 엄태완,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생존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8권 제1호 (2016), pp. 165~198; 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 연구: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3권 제1호 (2009), pp. 127~157; 정정애 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13), pp. 215~248; 한샘 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1), pp. 189~218.
- 30) 김경호, “새터민 정착지원체계의 대안적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2006), pp. 331~347; 김선화·박영희, “새터민 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성과,” 『통일연구』, 제11권 제2호 (2007), pp. 81~113; 김연희·백학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한국사회정책학』, 제18권 제4호 (2011), pp. 237~269; 김영수 외,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 (서울: 행정안전부, 2010); 박정란, “탈북자 지원체계의 쟁점과 발전 방향,” 『북한경제리뷰』, 9월호 (2010), pp. 50~77; 하영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제1호(2009), pp. 125~142.
- 31) 김영일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pp. 127~161;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에 관한

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남한사회 적응 수준에 초점을 맞추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복지태도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부 차원의 복지 관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부족함이나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³²⁾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특정 부분에 한정되기보다는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복잡하게 얽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정부나 사회에 요구하는 복지의 내용이나 수준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내용이 남한사회에 정착한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³³⁾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는 직접적인 재정, 구직, 친구, 의료 등에 대한 도움 요구가 많았던 반면, 4년차에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안내, 경제와 법률에 대한 상담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7년차에는 주택 구입, 의료, 경제와 법률 상담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pp. 179~239.

32) 한편,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부 차원의 복지와 관련해 남한주민 내 취약계층이나 외국출신 다문화집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박영자,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 p. 8; 엄태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5), pp. 5~42).

33) 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 연구: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pp. 127~157.

남한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남한사회 정착과 적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 취업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북한이탈주민들 다수가 취업을 정착과 적응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³⁴⁾ 이의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약성이나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배제 등이 주로 지목되어 왔는데 최근 한 연구는 북한에서의 ‘일’ 경험에 따라 남한에서의 취업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³⁵⁾ 즉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을 했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한에서 취업할 확률이 높고 기초생계수급자일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에서 경험한 사회보장을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³⁶⁾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보장을 ‘정부 지원, 급여와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뜻밖의 선물, 생계를 위한 수단,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빛 좋은 개살구, 임시방편에 불과함, 엇갈리는 욕구와 지원들’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으며, 기존 복지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가설을 본 연구에서 모두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태도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경제적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34) 김영수 외,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 pp. 26~28; 박영자,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 p. 8.

35) 김화순,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4), pp. 1~40.

36) 김영일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pp. 127~161.

북한은 1970년대부터 경제침체를 겪었고 1990년대 이후부터 식량난과 경제난을 경험하는 등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그리고 체제 위기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배급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마당이 확대되고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⁷⁾ 이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시장경제나 자본주의가 완전히 낯선 체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미 북한이나 제3국가에서 남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한 상태에서 남한에 입국하고 있고, 탈북동기 또한 경제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³⁸⁾ 북한이탈주민들도 개인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다른 복지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남한에서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고용 지위가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수록 복지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나 제3국가에서 시장활동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남한사회에서 직접 겪은 시장활동 경험은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즉 장마당과 비교할 수 없이 고도화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생계나 생존에 있어 북한에서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장마당을 통해 개인의 생존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배급제를 비롯해 복지의 상당 부분을 국가로부터 제공받았던 복지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제

37) 북한이탈주민 응답자(67명) 중 80%(54명)가 장마당에서 물품을 팔거나 구입한 경험이 있었고, 협동농장과 개인텃밭 중 개인텃밭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78명) 중 98.7%(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무철,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개방 의식: 북한이탈주민 면접 조사를 통한 추론,” 『북한연구학 회보』, 제10권 제2호 (2006), p. 197).

38) 탈북동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4.3%가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고, 26.9%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 90).

공되는 남한사회의 복지에 대한 만족감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사회에서의 소득이나 고용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지태도에 있어 북한이탈주민들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가설이 가능한데 소득이나 고용지위와 같은 개인의 객관적인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요인이 아닌, 경제(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남한체제 경제운용 원리의 핵심인 시장에 대한 태도, 북한이나 남한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 국가경제나 가정경제에 대한 개인적 전망(이나 기대) 등이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거나 북한이나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국가경제나 가정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복지에 대해 소극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북한통일연구센터에서 2014년에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생활조사’ 설문자료를 사용한다. 남한주민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확률표집이 어렵기 때문에 표본은 초기에 소규모 응답자들에게 다른 응답자를 소개받아 조사를 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해 수집되었다.³⁹⁾ 설문조사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에 응

답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405명이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 32.59%(132명), 여성 67.41%(273명)이며, 연령대는 20대는 22.47%(91명), 30대는 29.63%(120명), 40대는 27.90%(113명), 50대는 11.11%(45명), 60대 이상은 8.89%(3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는 73.83%(299명), 인천 거주자는 19.51%(79명), 경기도 거주자는 6.67%(27명)이다.

분석방법은 범주형 자료분석에 맞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변수의 범주들 간 거리가 같아야 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⁴⁰⁾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2. 변수의 구성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두 개의 차원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복지(가치)에 대한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이다.

전자의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문항을 사용했다.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동의한다’(1점)에서부터 ‘매우 반대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역코딩했다. 평균은 3.87점으로 중간보다 높아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인다.

후자의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별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출 증가나 감소 여부를 묻는 항목을 사용했다. 개별 복지영역은 건강보험과

39) 최순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북한의 틈새, 사람의 공간』,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2016년 6월 17일), p. 331.

40) 허수연·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p. 216.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교육, 주거지원,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 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가족지원,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실업급여)으로 총 9개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훨씬 더 많이 지출’부터 ‘훨씬 더 지출’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역코딩했다.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요인이기도 하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경제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을 객관적 조건으로서 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의식으로서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경제적 요인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존재와 인식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이 태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조건으로서 경제적 요인변수는 소득과 고용지위, 복지경험을, 주관적 의식으로서 경제적 요인변수는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시장에 대한 태도,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 대한 기대, 북한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선택했다. 통제변수는 정치적 성향,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다.

소득 변수는 월 평균 총소득이며,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는데 로그변환값을 사용했다. 고용지위는 사업주/자영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되어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사업주/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를 정규직 그룹으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는 정규직 그룹을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하는 이항변수를 만들었다. 복지서비스 경험 변수는 총 16개의 복지서

비스⁴¹⁾에 대한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16개의 문항에 응답한 수를 모두 더했고 숫자가 많을수록 복지경험이 많은 것으로 코딩했다.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은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문항을 사용했다. ‘매우 동의한다’부터 ‘매우 반대한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격차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역코딩했다. 시장에 대한 태도는 레파르트와 브리든(Noreen Lephardt and Charles Breeden)이 개발한 MAI(Market Attitude Inventory)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항을 사용했다.⁴²⁾ MAI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문항 11개와 부정적인 문항 11개로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개 부정적인 문항을 역코딩해 점수가 높아질수록 시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2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더하고 그 값을 22로 나눈 후 100을 곱한 평균값을 시장에 대한 태도 변수로 만들었다.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 대한 기대는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와 “향후 귀하의 가정경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라는 항목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지는 5점 척도로 코딩했다. 북한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북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위치는 어떠하였습니까?”와 “남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위치는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역코딩했다. 척도는 5점 척도

41) 경제적 지원(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가족문제 상담, 약물(알코올) 상담, 자녀양육 기술과 교육, 금전(재정)관리 교육, 법률상담, 남한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교육, 심리적 고통에 대한 치료, 개인관리(사례관리) 서비스, 대인관계 기술(의사소통방법과 예절 등), 일상생활 언어교육.

42) Noreen Lephardt and Charles Breeden, “The Market Attitudes Inventory: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Economics and Economic Education Research*, Vol. 6, No. 3 (2005), pp. 63~72.

이며, 하, 중하, 중, 중상,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변수로는 정치적 성향,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을 선택했다. 정치적 성향은 ‘매우 진보적’(1점)에서 ‘매우 보수적’(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점수가 높아질수록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역코딩했다. 성별은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하는 이항변수로 코딩했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코딩했다. 결혼은 결혼한 사람을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0으로 하는 이항변수로 코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에는 북한에서의 학력과 남한에서의 학력이 모두 표기되어 있는데 설문 응답자 중 약 70%가 남한에서 추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에서의 학력만 사용하기로 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는 1, 중학교는 2, 고등학교는 3, 대학교 이상은 4로 해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은 것으로 코딩했다.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은 개월 단위로 계산했으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연속변수로 코딩했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모두 5점 척도인데 모든 항목의 평균이 3.5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즉 소득격차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각각의 복지정책에 대해 지출을 증가해야 한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

독립변수 중심으로 설명하면, 소득 평균은 월 144만 원 정도이며, 로그 변환값 평균은 4.77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127만 원 정도이며, 응답자 중 약 절반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고용지위는 평균 0.36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두 배 정도 많다. 복지서비스는 총 16개 중에서 평균 7-8개 정도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은 평균 3.87점으로 소득격차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시장에 대한 태도 평균은 321점으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가 절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많고 가정경제보다 국가경제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북한과 남한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중간보다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보다는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소득격차 정부책임	405	3.87	.92	1	5
	건강보험과 보건	405	3.6	.99	1	5
	국민연금	405	3.6	.98	1	5
	교육	405	3.67	1.07	1	5
	주거지원	405	3.65	.99	1	5
	빈곤층지원	405	3.89	.94	1	5
	노인생활지원	405	3.94	.94	1	5
	장애인생활지원	405	3.95	.96	1	5

	육아가족지원	405	3.96	.97	1	5
	실업대책과 고용보험	405	3.69	.95	1	5
독립 변수	소득(log)	405	4.77	.65	2.48	6.80
	고용지위	204	.36	.48	0	1
	복지서비스 경험	405	7.42	3.84	1	16
	소득격차 인식	405	3.87	1.03	1	5
	시장에 대한 태도	405	321.37	40.20	209.09	431.82
	국가경제전망	405	3.80	1.11	1	5
	가정경제전망	405	3.59	1.08	1	5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405	3.69	1.05	1	5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405	4.06	1.08	1	5
통제 변수	정치적 성향	405	3.32	1.21	1	5
	성별	405	.67	.47	0	1
	연령	405	.45	12.42	20	70
	결혼 여부	405	.73	.45	0	1
	교육	405	2.55	.79	1	4
	남한 거주기간	405	6.49	3.31	1	12

2. 복지태도1: 소득격차 해소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태도

우선,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3.87점이다. 본 문항이 5점 척도이고 3점이 중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은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는 데 찬성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항별 응답비율을 보면, 이러한 경향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응답자 중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반대하는 비율은 매우 반대(1점)와 반대(2점)를 모두 합해 7.16%인 반면, 동의(4점)와 매우 동의(5점)를 합한 비율은 72.84%이며, 중간(3점)은 20%이다.

〈표 2〉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해 소득격차 해소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고용지위, 소득격차 인식, 시장에 대한 태도,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정(+)의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고용지위, 소득격차 인식,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연령 변수이며, 부(-)의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시장에 대한 태도변수이다.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 고용지위는 강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의 소득이 얼마인가보다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직업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복지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도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성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식과 태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의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도 복지태도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남한에서 생활의 안정을 확보한 동시에 남한사회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⁴³⁾ 생활의 안정을 확보한 북한

43)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는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주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탈주민일수록 소득격차의 책임이나 원인을 개인보다는 제도적·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 주체로 정부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표 2〉 소득격차 해소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

	(1) 정부의 책임	(2) 정부의 책임	(3) 정부의 책임	(4) 정부의 책임
소득(log)	-0.337 (0.249)			-0.452 (0.275)
고용지위	0.701** (0.321)			0.767** (0.339)
복지서비스 경험	-0.0224 (0.0412)			0.00501 (0.0445)
소득격차 인식		0.822*** (0.145)		0.703*** (0.192)
시장에 대한 태도		-0.00354 (0.00260)		-0.00728* (0.00382)
국가경제전망		-0.114 (0.104)		-0.144 (0.148)
가정경제전망		-0.0266 (0.104)		0.193 (0.136)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0.0231 (0.0901)		0.0732 (0.147)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0.203** (0.0850)		0.310** (0.140)
정치적 성향			0.202** (0.0852)	0.311** (0.125)
성별			-0.230 (0.207)	-0.195 (0.292)
연령			0.0112 (0.00930)	0.0383** (0.0159)
결혼 여부			-0.187 (0.224)	0.0138 (0.406)
교육			0.0724 (0.125)	-0.00642 (0.205)

남한 거주기간			-0.00452 (0.0298)	-0.00519 (0.0412)
Constant cut1	-5.339*** (1.344)	-1.520 (1.170)	-2.619*** (0.551)	-1.777 (2.351)
Constant cut2	-4.422*** (1.226)	-0.444 (1.136)	-1.600*** (0.500)	-0.801 (2.262)
Constant cut3	-2.603** (1.229)	1.270 (1.132)	-0.00572 (0.497)	1.251 (2.234)
Constant cut4	-0.432 (1.217)	3.731*** (1.162)	2.170*** (0.509)	3.838* (2.268)
Observations	204	405	405	204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유일하게 부의 효과를 보인 시장에 대한 태도 변수는 계수값이 -0.00728로 매우 낮다. 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만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전반적으로 남한에서의 생활과 경제적 안정 여부,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복지태도2: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복지정책에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인지 또는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변수들의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 개별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의 지출이 증가되는 것을 바라는지 또는 축소되는 것을 바라는지에 대한 설문을 활용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표 3〉은 건강보험과 보건, 국민연금, 교육, 주거지원에 대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건강보험과 보건에 대한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는 국가경제전망,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성별, 연령 변수이다. 국가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건강보험과 보건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지출 축소를 원한다. 둘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성별, 연령, 결혼 여부가 유의미성을 가진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지출 증가를 원하지만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지출 축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교육과 관련해서는 고용지위가 안정적이며, 복지서비스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한다. 통제변수에서는 연령만이 유의미성을 보이며 고령일수록 지출 축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주거지원 분야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복지서비스 경험,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두 변수뿐이다.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주거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3〉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분석¹

	(1) 건강보험과 보건	(2) 국민연금	(3) 교육	(4) 주거지원
소득(log)	0.0469 (0.318)	0.0585 (0.289)	-0.369 (0.302)	0.194 (0.261)
고용지위	-0.230 (0.338)	-0.0227 (0.319)	0.594* (0.308)	0.221 (0.329)
복지서비스 경험	0.0397 (0.0396)	0.0499 (0.0387)	0.0860** (0.0414)	0.0806** (0.0362)

소득격차 인식	0,245 (0,152)	-0,00756 (0,144)	0,156 (0,145)	0,123 (0,139)
시장에 대한 태도	-0,0012 (0,00355)	3,29e-05 (0,00360)	0,00164 (0,00379)	-0,00377 (0,00366)
국가경제 전망	0,238* (0,137)	0,126 (0,137)	0,199 (0,148)	0,0774 (0,167)
가정경제 전망	-0,135 (0,144)	-0,0300 (0,151)	0,180 (0,137)	0,211 (0,155)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0,0374 (0,143)	0,104 (0,147)	-0,0403 (0,146)	-0,166 (0,159)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0,338*** (0,119)	0,274** (0,125)	0,167 (0,127)	0,290** (0,138)
정치적 성향	-0,105 (0,107)	-0,0432 (0,110)	-0,0286 (0,106)	-0,0135 (0,105)
성별	-0,965*** (0,308)	-0,531* (0,291)	-0,347 (0,309)	-0,137 (0,286)
연령	-0,0289* (0,0154)	-0,0259* (0,0145)	-0,0341** (0,0167)	-0,0179 (0,0163)
결혼 여부	-0,310 (0,387)	-0,701* (0,380)	-0,0598 (0,399)	-0,0484 (0,408)
교육	0,233 (0,186)	0,256 (0,196)	-0,0137 (0,197)	-0,0872 (0,197)
남한 거주기간	-0,0169 (0,0382)	0,0515 (0,0372)	0,0167 (0,0400)	0,0619 (0,0424)
Constant cut1	-2,562 (2,419)	-1,801 (2,050)	-2,598 (2,373)	-1,575 (2,024)
Constant cut2	-0,871 (2,366)	-0,505 (2,043)	-1,405 (2,329)	-0,388 (1,992)
Constant cut3	0,83 (2,380)	1,305 (2,042)	0,0863 (2,321)	1,536 (1,999)
Constant cut4	2,590 (2,395)	2,950 (2,041)	1,517 (2,320)	3,276 (2,004)
Observations	204	204	204	204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네 영역의 복지정책과 관련해 복지서비스 경험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주요하게 정부지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경험 변수는 복지에 대한 경험이 증가할수록 복지에 대한 효용이나 필요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정부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복지서비스 경험이 교육과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와 관련한 복지서비스 경험이 많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충족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한국정부의 지원제도 중에서 이와 관련한 지원이 많다.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관련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변수는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변수는 세 개의 복지정책(건강보험과 보건의, 국민연금, 주거지원)에 대해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세 개의 복지정책이 개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빈곤층 지원, 노인생활 지원, 장애인생활 지원, 육아가족 지원,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빈곤층 지원과 노인생활 지원, 장애인생활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빈곤층 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격차 인식, 가정경제전망, 교육 변수이다. 대한민국의 소득격차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가정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빈곤

층 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지만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정부지출 축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생활 지원에서는 복지서비스 경험이 있고,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감소를 선호한다. 장애인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고용지위가 안정적이고, 소득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며,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출 감소를 선호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 분야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경험과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이 복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초기 정착·적응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위치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복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소득이 높아지거나 고용지위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한사회에서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경험이 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여준다.

반면,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세 분야 모두에서 매우 강하게 복지지출 감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교육 수준은 두 가지 의미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나 지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접촉하면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관용성과 개방성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⁴⁴⁾ 만약 교육 수준이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 교육

⁴⁴⁾ Charles R. Chandler and Yung-mei Tsai,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지출 감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회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감소를 지지한다는 것은 북한에서의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지위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용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4〉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분석2

	(5) 빈곤층 지원	(6) 노인생활 지원	(7) 장애인생활 지원	(8) 육아가족 지원	(9) 실업대책과 고용보험
소득(log)	0.337 (0.343)	0.121 (0.340)	0.112 (0.338)	0.431 (0.309)	-0.0962 (0.303)
고용지위	0.0607 (0.342)	0.435 (0.339)	0.615* (0.344)	0.0211 (0.359)	0.319 (0.344)
복지서비스 경험	0.0489 (0.0396)	0.0722** (0.0367)	0.0686* (0.0380)	0.0943** (0.0385)	0.0866** (0.0397)
소득격차 인식	0.211* (0.123)	0.180 (0.129)	0.238** (0.116)	0.347*** (0.126)	0.271** (0.109)
시장에 대한 태도	0.00368 (0.00408)	0.00181 (0.00395)	0.00351 (0.00388)	-0.00171 (0.00381)	0.00434 (0.00380)
국가경제 전망	-0.148 (0.176)	-0.0924 (0.176)	-0.0333 (0.181)	-0.0241 (0.181)	-0.297* (0.175)
가정경제 전망	0.291* (0.161)	0.218 (0.177)	0.139 (0.164)	0.130 (0.162)	0.451*** (0.157)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Science Journal*, Vol. 38, No. 2 (2001), pp. 177-188; Jens Hainmuller and Michael J. Hiscox,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1, No. 2 (2007), pp. 399~442.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0,0101 (0,156)	0,121 (0,145)	0,000125 (0,146)	-0,0829 (0,149)	-0,186 (0,147)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0,217 (0,137)	0,226* (0,134)	0,143 (0,137)	0,184 (0,139)	0,226* (0,135)
정치적 성향	0,0300 (0,134)	0,00893 (0,121)	0,00180 (0,118)	0,0187 (0,116)	0,0677 (0,116)
성별	-0,153 (0,282)	0,0352 (0,284)	-0,0867 (0,275)	-0,145 (0,297)	-0,396 (0,295)
연령	-0,00284 (0,0168)	-0,00126 (0,0167)	-0,0168 (0,0157)	-0,0222 (0,0155)	-0,0272* (0,0145)
결혼 여부	0,0966 (0,372)	0,0648 (0,388)	0,113 (0,392)	0,283 (0,382)	0,0153 (0,360)
교육	-0,420** (0,194)	-0,402* (0,212)	-0,410** (0,196)	-0,279 (0,194)	-0,136 (0,197)
남한 거주기간	0,0519 (0,0467)	0,0668 (0,0454)	0,103** (0,0457)	0,0855* (0,0466)	0,0845* (0,0452)
Constant cut1	0,827 (2,229)	-0,0496 (2,349)	-0,490 (2,260)	0,0285 (2,150)	-1,506 (2,101)
Constant cut2	2,200 (2,204)	1,391 (2,323)	0,586 (2,237)	1,136 (2,123)	-0,139 (2,032)
Constant cut3	3,591 (2,236)	2,683 (2,333)	2,151 (2,233)	2,393 (2,122)	2,111 (2,010)
Constant cut4	5,867*** (2,271)	4,762** (2,347)	4,168* (2,241)	4,564** (2,141)	4,003** (2,020)
Observations	204	204	204	204	204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한편, 육아가족지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경험, 소득격차 인식, 남한 거주기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를 경험했고,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며,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남한에서 육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남한정부의 정착지원제도에 육아와

관련한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은 동일한 상황의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지원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과 고용보험 분야에서는 복지서비스 경험, 소득격차 인식, 국가경제전망, 가정경제전망,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연령, 남한 거주기간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가정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남한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남한사회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아질수록 실업과 고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점점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국가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지출 감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한주민의 복지태도와 비슷한데 국가경제가 좋아질수록 실업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령일수록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어떤’ 복지정책이냐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선호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도 일정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V. 결론과 논의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이슈와 관련해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은 복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해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소득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보다 더 높으며, 개별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해결의 주체를 정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에 있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고용지위, 소득격차 인식, 시장에 대한 태도,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연령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시장에 대한 태도만이 정부의 책임성에 대해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수값이 낮아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 중에서는 고용지위와 소득격차 인식이 정부 책임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출 증감과 관련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객관적 지위를 나타내는 경제 변수들 중에서 소득은 어떤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고용지위는 고용지위가 높아질수록 교육, 주거지원, 장애인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경험은 교육, 주거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 육아가족지원, 실업대책과 고용보험 지출 증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는 직업의 안정성과 복지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것이 복지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다수가 취업을 정착과 적응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측면도 있다.⁴⁵⁾

주관적 인식으로서 경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득격차 인식은 빈곤층지원, 장애인생활지원, 육아가족지원,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앞의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에 대한 태도는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달리, 개별 복지정책 증감 여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전망 변수는 건강보험과 보건, 그리고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가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건강보험과 보건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는 찬성하는 반면,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적·정

45) 김영수 외,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 pp. 26~28; 박영자,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 p. 8.

신적인 고통과 이에 대한 지원을 보고하고 있는데 국가경제가 좋아지면 건강과 관련한 국가의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후자는 국가경제가 좋아지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이 감소하고 취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정경제전망 변수는 빈곤층지원 그리고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두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경제가 좋아질 경우에 빈곤층지원과 실업대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과거의 어려웠던 경험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정경제가 언제든지 나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건강보험과 보건, 국민연금, 주거지원, 노인생활지원,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생활안정이 안정되면서 복지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확대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복지문제를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조적·제도적 차원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된 정치적 성향은 소득이나 시장에 대한 태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은 건강보험과 보건 그리고 국민연금에만 영향을 미치며,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지출 감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교육,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해 정부지출 감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보수적일수록 복지의 축소를 선호한다는 한국인 대상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결혼 여부는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감소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에서의 교육은 빈곤층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거주기간은 장애인생활지원, 육아가족지원,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복지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형성된 원인으로는 우선 북한체제에서의 경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물질적 소유와 분배, 복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사회복지체제이다.⁴⁶⁾ 국가 중심의 체제 속에서 생활한 경험은 정부의 역할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인식이 남한생활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북한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복지를 제공받지 못했고 남한사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 커

⁴⁶⁾ 이철수·이윤진,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체제·범위·개입,”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2016), p. 506.

졌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만으로는 이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을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인식으로 나누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객관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고용지위와 복지서비스 경험, 주관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복지태도가 단순히 객관적 지위에 따른 개인의 이해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있어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인식이 모두 중요하지만 주관적 인식이 복지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격차 해소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뿐 아니라 9개의 개별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여부에 있어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과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변수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책임성과 복지지출 증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경제적·합리적 개인을 상정할 때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다고 인식할수록 불평등이나 소득격차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개인의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정부의 복지지출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이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사회적 지위를 경제적 이익의 관점보다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넷째,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는 증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증세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태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한주민들의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주민들은 복지 확대를 지지하면서도 증세는 거부하는 이중적인 또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와 이것이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볼 수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 자료에 증세와 관련한 독립적인 문항이 없다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는 여전히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한다. 추후에 조세와 관련한 문항이 있는 설문자료를 활용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016년 9월 말을 기준으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7,542명이고, 서울에 6,900명(25.05%), 경기도에 8,185명(29.72%), 인천에 2,584명(9.38%)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약 60%가 서울·경기도·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사회 자체가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도시유형별(자치구, 일반시, 시군/군)로 경제생활과 수준에 있어 격차가 크고 이는 북한이탈주민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를 일반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대 해석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⁴⁷⁾

47) 남북하나재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그 영향력은 남한주민의 것과 완전히 다르지도 완전히 같지도 않다. 대표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에 더 소극적이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연령의 경우도 일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지지출 축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고용지위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은 고용지위가 안정적일수록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나 일부 복지정책에 대한 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한주민은 영향이 없거나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은 북한이탈주민을 하나의 동질적이거나 단일한 집단으로 보서는 안 되며,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내의 다양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남한주민의 편견과 배제의 태도를 주요원인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를 구별하고 배제하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집단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에 거대한 갈등으로 촉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동일한 시민으로 보고 각각의 차이와 유사성, 갈등의 지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가시화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이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

실시하고 있는데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국민의 세금)을 받아 이뤄진 조사인 만큼 원자료를 공개하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 접수: 2017년 5월 1일 / 심사: 2017년 5월 4일 / 게재확정: 2017년 6월 1일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권혁용.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선호.”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3), pp. 303~322.
- 김경호. “새터민 정착지원체계의 대안적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2006), pp. 331~347.
-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1권 제1호 (2015), pp. 27~57.
- 김선화·박영희. “새터민 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성과.” 『통일연구』, 제11권 제2호 (2007), pp. 81~113.
- 김수완·김상진·강순화.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2호 (2014), pp. 67~90.
- 김연희·백학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한국사회정책학』, 제18권 제4호 (2011), pp. 237~269.
- 김영수·신미녀·현인애.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 서울: 행정안전부, 2010.
- 김영순·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9권 (2011), pp. 11~240.
- 김영일·전혜연·강선주·기지혜·권지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제4호 (2014), pp. 127~161.
- 김윤태·서재욱.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동향과 전망』, 통권90호 (2014 봄호), pp. 331~378.
- 김화순.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4), pp. 1~40.
- 김희자.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제16집 (2013), pp. 59~88.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7a.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7b.
- 노대명·전지현.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박영자.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 『미드리』, 제5권 (2011), pp. 6~21.
- 박정단. “탈북자 지원체계의 쟁점과 발전 방향.” 『북한경제리뷰』, 9월호 (2010), pp. 50-77.
- 서재욱 · 김운태.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1호 (2014), pp. 95~121.
-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01), pp. 179~239.
- 양재진 · 민효상.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제88권 (2013), pp. 48~96.
- 엄태완.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생존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8권 제1호 (2016), pp. 165~198.
- 엄태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5), pp. 5~42.
- 이무철.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 · 개방 의식: 북한이탈주민 면접 조사를 통한 추론.”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2호 (2006), pp. 187~212.
- 이성균.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2002), pp. 205~229.
- 이중섭.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2009), pp. 73~99.
- 전우택 · 유시은 · 엄진섭 · 김희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 연구: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3권 제1호 (2009), pp. 127~157.
- 정정애 · 손영철 · 이정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13), pp. 215~248.
- 주은선 · 백정미.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제3호 (2007), pp. 203~225.
- 최균 · 류진석.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제16권 (2000), pp. 223~254.
- 최대석 · 박영자.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51권 제1호 (2011), pp.187~215.
- 최순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북한의 틈새, 사람의

- 공간』,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2016년 6월 17일), pp. 327~338.
- 하슬잎 · 이우진.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2016), pp. 119~165.
- 하영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제1호 (2009), pp. 125~142.
- 한샘 · 남석인 · 김윤경.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1), pp. 189~218.
- 허수연 · 김한성.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호 (2016), pp. 203~235.

영문 자료

- Alesina, Alberto and George-Marios Angeletos. “Fairness and Redistribu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5, No. 4 (2005), pp. 960~980.
- Benabou, Roland, and Efe Ok.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No. 2 (2001), pp. 447~487.
- Chandler, Charles R, and Yung-mei Tsai.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Science Journal*, Vol. 38, No. 2 (2001), pp. 177~188.
- Derks, Anton. “Are the underprivileged really that economically ‘leftist’? Attitudes towards economic redistribution and the welfare stat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3, No. 4 (2004), pp. 509~521.
- Feldman, Stanley and John Zaller. “The Political Culture of Ambivalence: Ideological Responses to the Welfare St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1 (1992), pp. 268~307.
- Hainmu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1, No. 2 (2007), pp. 399~442.
- Hasenfeld, Yeheskel and Jane A. Rafferty.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Vol. 67, No. 4 (1989), pp. 1027~1048.

- Iversen, Torben, and David Soskice.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4 (2001), pp. 875~893.
- Jeager, Mads Meier. "What Makes People Support Public Responsibility for Welfare Provision: Self-Interest or Political Ideology? A Longitudinal Approach." *Acta Sociologica*, Vol. 49, No. 3 (2006), pp. 321~338.
- Lephardt, Noreen and Charles Breeden. "The Market Attitudes Inventory: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Economics and Economic Education Research*, Vol. 6, No. 3 (2005), pp. 63~72.
- Meltzer, Alan and Scott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No. 5 (October 1981), pp. 914~927.
- Papadakis, Elim. "Class Interests, Class Politics and Welfare State Regim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4, No. 2 (1993), pp. 249~270.
- Svallfors, Stefan.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Vol. 38, No. 1 (1995), pp. 53~74.
- Taylor-Gooby, Peter. "Two Cheers for the Welfare State: Public Opinion and Private Welfar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2, No. 4 (1982), pp. 319~346.

North Korean Refugee's Attitude to Welfare in South Korea

Kwon, Soo Hyu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ee, Sung-Woo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a introductory study what any factors have a crucial effect on welfare attitud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This paper uses two indicators - government responsibility on income gap, preferences on nine welfare policies - a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use several variables of objective 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economic judgement. Objective variables are income, employment status, some experience of some welfare services. Subjective things are perception on social income gap, attitude on market economy, prospects on national economy, prospects on household economy, social status in North Korea, social status in South Korea. This paper finds that employment status, experiences of welfare services among objective variables have some significant effects on welfare attitud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at significant variables among subjective things are perception on social income gap, social status in South Korea. Depending on this results, this paper argues that changes of welfare attitud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epends on perceptions of economic stability and understanding on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Welfare Attitude, Objective Economic Status, Subjective Economic Perception.

권수현(Kwon, Soo Hyun)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여성대표성, 여성의 정치참여,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선호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인의 대북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2007-2014”(2016), “피를 나누는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과 결정요인”(2015), “여성대표성 재고찰: 모성보호법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2016), “호주제는 왜 제17대 국회에서 폐지되었나”(2015) 등이 있다.

이성우(Lee, Sung-Woo)

고려대학교 영문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비교정치전공으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정치, 비교정치경제, 이행기 정의와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업적으로는 “독일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의 정치적 제약사항 검토: 한반도 통일이후에 대한 시사점”(2016),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특성 인식과 투표: 17대와 18대 대선 비교분석”(2015), “발전국가의 물가정책의 다양성: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2014), “The Monetary Institution Change and Policy Performance: Focusing on the Korean Case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2012) 등이 있다.